

경제학회 '균형발전 전략 득과 실' 정책포럼

“수도권 투자는 수도권만의 잔치”

“물량투입 위주 성장정책 각종 부작용 양산” “중앙집중, 과잉생산 초래 성장률 하락 불러”

중앙집권체제 속의 물량·경제성 위주의 성장정책은 한국사회의 외형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나, 지역별 불균형 심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양산한 만큼 분권화 및 지방 위주 정책이 지속적으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방에 대한 투자는 같은 물량이라 하더라도 수도권에 대한 투자보다 해당 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 결과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학회는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놓고 21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득과 실'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등 참여정부의 주요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학계 전문가들의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이 포럼에서 이민원 광주대 교수(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사명'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균형발전 전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국은행(2007년)의 지역산업연관표를 통해 지방에 대한 투자가 중앙에 대한 투자 보다 효율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은 타 지역에 비해 진후방연관성이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방연관성은 타 지역에 중간재를 판매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후방연관성은 타 지역으로부터 중간재를 구입하는 정도를 말한다.

수도권은 '타지역 수요의존도'가 20% 정도의 자급자족 형태로 타 지역에 대한 전후방연관성 또한 19%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라·경북 등 지방은 '타지역 수요의존도'가 40% 내외이며, 타 지역에 대한 전후방

연관성도 36%~43%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수도권에 대한 투자는 투자 효과가 지방 등 타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수도권만의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예가다.

지방투자는 부족한 사회간접자본과 산업구조로 인해 성장에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타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커 전반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중앙집권 체제 아래 물량투입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했으나 여러 부작용에 직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2005년 기준 한국의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48.3%로 2000년 기준 일본(32.6%), 프랑스(18.7%), 영국(12.2%)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뿐 아니라, 추세대로라면 2011년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될 전망이다. 또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최고치와 최저치의 비율로 나타내는 지역간 불균형도 역시 우리나라는 2001년 기준 2.33을 기록, 프랑스(1.9)

영국(1.8) 등을 웃돌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경북대 장지상 교수는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장메커니즘에 맡겨놓은 결과 나타난 외부효과적 한 현상”이라며 “집적의 이익은 있지만, 현재는 너무 많이 집적돼 불이익이 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장 메커니즘만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동안 중앙집권적인 발전정책에 의해 수도권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 왔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왜곡을 시정하고 그동안의 압축성장이나 불균형 발전에 의한 후유증을 보강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 정책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폐해와 정리방향” 논문에서 “균형을 통한 발전” 정책은 “실현될 수 없는 허구”이며, 오히려 “발전을 통한 균형”이 올바른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리는 입장을 보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親-非盧 분열 격화 범여권 대통합 촉진

'유시민 복귀' 범여권 대선구도 변수

열린우리당 복귀설이 끊임없이 나돌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장관직 사퇴와 당 복귀를 전격 선언하면서 범여권 통합과 대선구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유 장관에 대한 당내 반감이 상당한 수준이어서 그의 복귀를 계기로 당이 친노대 비노 진영의 대립구도가 더욱 확실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내 구심력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에서 유 장관 복귀에 따른 친노·비노 갈등 양상은 범여권 통합 논의와 맞물려 비노 진영의 2차 집단탈당을 재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범여권 일각에서는 그의 복귀가 오히려 우리당의 '핵분열'을 야기하면서 범여권 통합작업을 촉진하는 역설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 장관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당원,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수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당 내에서는 여전히 그의 대선출마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이 많다.

그가 출마할 경우 한명숙,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김혁규 의원 등 친노성향 대선주자 간 '노심 잡기' 경쟁도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전 오전 전 정부청사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장관직 사퇴를 선언한 뒤 회의실을 빠져 나가고 있다. 유 장관 뒤로 김근태 전 복지부장관 등 역대 장관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한편, 유 장관의 복귀선언에 대한 범여권의 반응은 정파별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비노측 초선의원은 “노 대통령 이 대통합을 막아보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안희정으로는 힘이 약하고 의원 장악력이 떨어진다고 판단, 유시민을 보내는 것”이라며 “이를 탈당 명분으로 삼고 나갈 사람도 적잖이 생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옛 참정연(참여정치실천연대) 및 의정연(의정연구센터) 소속 친노 의원들은 유 장관의 복귀는 다른 장관들의 사례처럼 본인의 당 복귀 의사를 노 대통령이 수용한, 일상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기홍 의원은 “장관 하다 당에 돌아온 사람이 한두 명이나 돌아올 필요가 있느냐 돌아오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중도개혁통합신당 노식래 부대변인은 “적절하지 못한 언행으로 정치에 개입해온 유 장관의 사퇴는 논란이 불을 보듯 자명하다.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자숙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던 유 장관이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마당에 복귀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내정치에 관여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상임전국위원회 경선을 확정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이명박 전 서울시장, 강재섭 대표, 박근혜 전 대표, 고진화 의원(왼쪽부터)이 21일 서울 김포공항 스카이스티에서 열린 제3차 전국위원회에서 공경 경선을 다짐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인단 유권자의 0.5%로 확대 투표 방식 전국 동시 실시로 수정

대선주자 공정경선 결의도

한나라당은 21일 오후 김포공항 스카이스티 컨벤션센터에서 전국위원회 및 상임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대통령후보 경선 틀과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또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등 당내 대선주자들은 이 자리에서 공정 경선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23일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선관리위원회를 꾸리고, 28일께 검증을 출발시킨 뒤 이달 말이나 내달초께 후보 등록을 하면서 본격적인 경선전에 돌입한다.

이날 확정된 경선 틀은 시기 조항이 선거일 전 '180일까지'에서 '120일까지'로 변경됐으며, 선거인단의 수는 전체 유권자수의 '0.1%'에서 '0.5%'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당내 경선은 '8월~4만명'에서 '8월~21만명' 방법으로 치러지게 됐다.

또 국민참여선거인단의 투표 방식도 기존 사·도별 순회방식에서 전국동시 실시로 수정됐고, 당원 및 일반국민 선거인단 구성에서 40세 미만 비율이 '30% 이상'에서 '20% 이상 40% 이하'로 바뀌었다.

이날 전국위에서는 또 이 전 시장, 박 전 대표, 원희룡 의원, 고진화 의원 등 대선주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공정경선 결의대회도 가졌다.

대선후보 4인은 각각 '공·정·경·선'이라는 뜻을 들고 참석자들과 함께 한 글자씩 열창했으며, 단상에 올라 강 대표와 함께 손을 모아 결의를 다졌다.

이처럼 양대 주자가 '패어 플레이'를 다짐했지만 이를 어느 정도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참여한 쟁쟁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학살 원흉 구속·특별법 제정에 감사”

5·18 단체 'YS 감사패' 내용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쓰여 있다.

감사패는 80년 5월 당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에 십자가여!'를 발표했던 김준태 시인이 초안을 작성했다. 하지만 재단은 문안의 일부 표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5·18 유족회 등의 의견을 수렴, 몇 차례에 걸쳐 수정을 거쳤다.

김 전 대통령의 방문을 진보연대 등이 반대하는데 부담을 느낀 5월 단체들이 민감한 문장을 삭제한 것으로, YS의 초창을 둘러싸고 단체 내부의 미묘한 감정을 보여주고 있다.

진보연대 측은 21일 오후 '김영삼 전 대통령 감사패 전달 반대'를 주장하며 5·18 기념문화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으나, 이를 막는 5·18 부상자회 등과 한때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5월 단체들이 김영삼(YS) 전 대통령을 초청해 전달할 예정인 '감사패'의 문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5·18 기념재단(이사장 이홍길)과 5·18 민주유공자유족회(회장 정수만) 등 5월 단체가 22일 김 전 대통령에게 전달할 기념패의 첫 문장은 “헌정사상 최초로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대통령으로서 ‘세기의 재관’을 통해 전직 두 대통령을 구속”이라고 시작된다. 광주학살의 주범으로 꼽히는 전두환·노태우씨를 범정에 세운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것이다.

기념패에는 또 “불의에 대한 항쟁과 대대적 상을 단련하여 보여준 1980년 5월의 광주정신을 영원히 기리고 광주시민의 명예회복과

BORYUNG
보령제약

50
BORYUNG
A healthy society is the only dream of Boryung
보령 창립 50주년

목이 칼칼할 땐, 용각산 쿨!

황사



매연 먼지

황사, 매연, 미세먼지로 인해 목이 답답하고 칼칼할 땐 용각산 쿨입니다.
물 없이 먹는 과일, 용각산 쿨은 칼칼한 목에 직접 작용합니다.

칼칼한 목을 시원하게~용각산 쿨!





▶ 기관내부에서의 점액 분비 증가와 섬모운동 촉진으로 가래를 제거해줍니다.

▶ 신맛하고 시원한 복숭아향과 민트향, 두가지 향이 있습니다.

▶ 물 없이 먹는 과일이라 휴대가 간편하고 먹기 편합니다.

용각산 쿨
TV-CF



※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의 주의 사항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심의필: 908-0500